

침략 · 점령 지원 파병

비난받고 책임져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다

이라크 · 레바논에서도 철군하라

노무현 정부와 주류 언론이
피랍 사태의 비극을 희생자들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선동에
나섰다.

피랍자 석방 합의 직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은 “파병 때문에
[피랍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
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도
리어 “[피랍 당사자들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주
류 언론들도 “무모한” “공격적
선교”를 다시 들먹이며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를 적극 돕고 있
다.[3면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것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
짓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납치돼 살해된 이유는
단 하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도와 아프가니스탄
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피랍자 석방 뒤 발
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의 행
동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민
에게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 행
위에 대한 반작용[이고] ... 한국
정부는 2백 명의 군대를 아프가
니스탄에 파견해 미국이 주도하
는 연합군의 작전을 돕고 있다”
고 말했다.

천호선은 “인도는 파병국이
아닌데 3번이나 피랍됐다”고
했다. 그러나 인도인 납치 사건

들도 인도 정부가 아프가니스
탄 점령에서 한 구실에 그 뿌리
가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인도 정부와 기업들
은 이른바 ‘재건’ 사업에 적극
참가해 왔다.

불통

이러한 재건 사업은 외국 기
업과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관리
들의 배만 불러 왔고, 상당수는
점령군을 돕는 병참 지원 사업
에 불과했다. 인도인 납치와 피
살은 인도 정부가 이러한 재건
사업 참가를 중단하라는 탈레반
의 요구를 거부한 결과였다.

탈레반과의 협상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국격(國格)”과 “국익”
이 “훼손”됐다는 조 · 중 · 동의
주장은 더욱 역겹다.

대체 침략 전쟁에 동참해 애먼
자국민들을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만큼 “격”이 떨어지는 일
이 어디 있단 말인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또 무엇인가?

조 · 중 · 동의 “특사 파견”도
문제이고, “구출작전 배제”도
문제이고, “직접 협상”과 “철군
약속”은 더욱 문제였다고 투덜
댄다. 피랍자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한다는 얘기도.

》3면으로 이어짐

기독교 선교,
어떻게 볼 것인가

3면

2007 대선과 진보대연합

6~7면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12면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8면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망

7면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의 교훈

5면



국제

— 볼리비아 제헌의회의 위기
— 일본 아베 정권의 위기
— 칠레 노동자 시위
— 그리스 산불의 진실

4~5면

존 몰리뉴 칼럼

— 오늘날의 자본주의

9면

www.counterfire.or.kr

새롭게 개편된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홍콩 철근 노동자 파업
한 달 가까이 투쟁 중인 이 노동자들은
2006년 반WTO 시위 때 민주노총 등 한
국 참가단에게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버마 대중 시위
독재 정부는 생필품 가격 상승에 반대하
는 시위가 항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두
려워하고 있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그 쪽[탈레반]에서 인질을 안 내 놓으면 내가 대신 인질이 되고 그 사람들을 좀 풀어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 전두환, 정말 그랬어야 했는데

“〈조선일보〉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진행 동안은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한 적이 거의 없다.”

—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의 솔직한 토로

“마치 사방천지 불이란 불은 다 깜빡이면서, 전후진, 좌우회전을 쉴 새 없이 반복하는 오발진 차량을 보는 것 같다.”

— 이명박을 비꼬는 심상정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지만, 아무튼 이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현금으로 낸 것만 1백조 원이 넘는다.”

— 부동산 투기에 일가견이 있는 이명박

“유시민 후보가 멧돼지를 잡는 데 공수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제의 갈따구 잡는 데 해병대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 민주신당 경선 토론회에서 김두관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한혈하려고 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냐’ 물어보더라요. ‘살았다’ 그러니까 ‘너 광우병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한혈 못한다’는 거예요.”

— 정태인 씨 가족이 한혈을 못하는 이유

“두번째 접가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경찰서에서 나오던 날이었어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경쟁하는데 추천을 받는다는 안내문이 집에 와 있더라구요. 너무 신경질이나서 확 찢어버렸어요. 한나라당에 전화해서 더는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구요.”

— 한나라당 열성당원이었던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방해’했을 뿐이다

8월 29일 이랜드 사측은 우리 〈맞불〉과 발행 단체인 ‘다함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이랜드의 고소를 커다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이랜드에 타격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단체와 신문이 제일 먼저 고소당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랜드도 ‘다함께’가 맨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연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물론 이랜드의 고소 이유는 터무니없다. 우리가 ‘십일조 1백30억 원과 대량해고라

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이랜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일조 1백30억 원’은 올해 초 보수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투데이〉에 실린 김성광 목사의 칼럼에도 나온 내용이다. 더구나 이랜드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했다는 사실은 온 사회가 아는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을 폭로하고 연대 투쟁한 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아니다.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 행위를 ‘훼손’하고 ‘방해’했을 뿐이다. 전환배치와 외주화, 대량해고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한 이랜드야말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당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랜드와 박성수다.

지금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관련해 무려 12명이 구속돼 있고, 5명이 수배 상태이며 2백41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우리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과 민변이 구성한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이랜드 사측의 고소에 대응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부위원장이 옥중 편지에서 말했듯 “구속이든 해고든 공권력 투입이든 여론조작이든 구사대 동원이든 투쟁의 불쏘시개일 뿐[이며] …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거대한 노동자 대투쟁의 물꼬를 트는 일만이 남았다.”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은 채 임기를 끝내려 한다. 지난해 구속 노동자 2백71명의 74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올해 7월과 8월 사이 2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는데 그 중 20명이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더구나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관련해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도 대량 구속하려 하고 있다.

8월 28일, 법원은 구권서 전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현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온 것’이었다.

노동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검찰과 법원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현대차 회장 정몽구와 ‘조폭’ 재벌 김승연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정몽구는 버젓이 감옥 밖에서 기

아차 비정규직 파업을 짓밟았고, 김승연은 “우울증” 때문에 감옥 생활을 못하겠다고며 병원에 가 있다. 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이랜드일반노조 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말이다.

구속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일부 구속노동자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이랜드 투쟁 승리” 등을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을 했다.

지금도 안동교도소에서는 포항 건설노조 심진보 동지와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의 정창윤 동지가 “닭장이나 개장보다도 못한” 교도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투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투쟁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을 결코 가두지 못했다.

유청하

안병문을 석방하라

검찰은 뉴코아·이랜드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다함께’ 회원이자 부천지역일반노조 조합원인 안병문 동지를 구속 기소했다.

안병문 동지는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에게 “명예 조합원”이라고 불릴 만큼, 헌신적으로 이 투쟁에 연대했다. 그는 상암점 농성 당시 20여 일 동안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농성장을 지켰고 농성장 침탈 당시 조합원들과 함께 연행됐다. 석방된 뒤에도 새벽까지 신문배달을 하다가 잠도 자지 못한 채 투쟁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동안 신문 배달, 치킨 배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던 안병문 동지에게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희망이었다.

그래서 안병문 동지는 “이 투쟁은 내게 너무나 각별한 의

미가 있다. 꼭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말했었다. 결국 그는 7월 27일 집회 때 다시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다.

검찰은 안병문 동지의 ‘안티조선’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실형을 구형하려 하고 있다. 안병문 동지는 2005년 6월 〈조선일보〉 인쇄소 방화로 구속돼 1년간 실형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안병문 동지가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정권들에 빌붙어 온 〈조선일보〉에 반대해 행동한 것은 정당했다. 〈조선일보〉는 이랜드 파업에 대



해서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민노총이 깃발을 내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다.

노무현 정부와 검찰은 안병문 동지를 비롯해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박설

안병문 동지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 영등포구치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서신을 보냅니다(수감번호 3411)
- 면회를 갑시다(개봉역 5분 거리, 문의: 011-9944-8886)
- 2차 공판에 함께합시다(9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기독교 선교, 어떻게 볼 것인가?

최일봉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단이 천만다행이게도 9월 2일 무사귀환했다. 반전운동은 배형규·심성민 씨의 불가피하지 않았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마음으로 무사귀환 피랍자들을 환영한다.

인천공항에서 계란을 던지려 하는 등 피랍자들을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는 ‘테러에 너무 유화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혈세 낭비’ 따위를 운운하는 우파적인 목소리일 뿐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피랍자를 비난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미군 등 나토군과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맞불> 기고자들과 반전 운동 자체는 언제나 이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제국주의(그리고 그 야류)가 진정한 문제이고 진정한 쟁점이라고 그동안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차적인 문제 — 종교 문제, 특히 기독교 선교 문제 — 에 대해서도 맑스주의자는 입장 밝히기를 요구받고 있다.

먼저, 우리는 국제주의자로서 당연히 제국주의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쟁점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적 점령이나 침략을 한국이 돕는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봉사 선교 일지라도) 활동이든 NGO 구호 활동이든 해서는 안 된다.**

선교든 구호든 모두 제국주의 점령자들과 현지 꼭두각시의 지배를 결과적으로 돕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소위 ‘인도주의적’ 제국주의는 점령지에서 생색내기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후원한다. 가령 <경향신문> 8월 30 일치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정부는 동의·다산부대의 철수와 별개로 미국이 요청하는 NGO 등의 지방재건활동 참여 문제를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은 지난 5월 아프간의 지방재건팀(PRT), 지역재건팀(RRT) 참여 등을 요청해 왔다.”

점령 당국의 처지에서 볼 때 구호는 거대한 대중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최악

한국군 점령지에서의 선교 반대라는 일반적인 입장이 구체적인 이번 피랍 무사귀환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의 빈곤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점령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지배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제공한다. 반면에, 점령지 주민인 수혜자는 이런 구호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느낀다.

공동 운동

파병 한국군이 점령자의 일부인 나라에서 선교 봉사 활동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번에 무사귀환한 피랍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한 친구를 반기기보다 야단치는 일부터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피랍자들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나머지 소수인 보통 사람들로, 그저 선량한 마음과 신심만으로 오지에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 점령지에서의 선교 반대라는 일반적인 입장이 구체적인 이번 피랍 무사귀환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무사귀환자들에 대한 비난이 미국과 한국 정부들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소제국주의적 가해자가 아닌 나라에서는 기독교(정확히 말하면 개신교)가 공세적 선교 활동을 해도 좋을까? 가령 중국 선교는 어떤가?

비록 옛 소련과 북한 등지의 극악무도

한 스탈린주의로 말미암아 진정한 맑스주의가 부당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진정한 맑스주의는 국가가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예를 들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1927년 스탈린 반혁명 때까지 러시아에서 침례회나 오순절회 등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는 신도 수가 10만 명에서 1백만 명 이상으로 크게 번창했다. 특히, 1918년 10월 내전 상황인데도 트로츠키 주도로 혁명 정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의료분야 대체복무도 인정하면서 병역 기피를 위해 많은 청년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입교했다.*

원칙을 존중하는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한국이 보조 점령자 노릇을 하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도 선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선교 금지를 정부에 촉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세적 선교 방식과 그런 선교 개념을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문화’라는 학술 용어가 있을 정도로 세계의 수많은 인종들 속에서 종교와 문화는 서로 융합돼 있고, 또 이 종교문화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의 근거가 돼 있다. 가령 이슬람 공포증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 인종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차별에 반대해 문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맑스주의자는 종교 다원주의도 지지하는 것

이 일관된 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유일무이함과 우월함을 강조하는 선전 중심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육·의료·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공동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 돼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의 선교 개념(‘하나님의 선교’라는)과 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복음’(기독교 고유의 메시지)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경험은 보여 주듯이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자들과 유착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미온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람직한 선교 방식은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적 봉사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서도 이들과 공동 운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필자 최일봉은 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을 공부했다.

* P. Sleeves, *Keeping the Faiths: Religion and Ideology in the Soviet Union*, 1991, pp. 85-86; P. Brock and T. P. Socknat, eds., *Challenge to Mars: Essays on Pacifism from 1918 to 1945*, 1999, pp.21-40.

1면에서 이어짐

비정하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한 다른 동맹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인 피랍자 석방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아프가니스탄, 독일, 캐나다 정부는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직접 협상과 철군 약속을 비난했다. “[탈레반과의] 협상은 테러 활동을 부추길 뿐”(캐나다 외무장관 막심 베르니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점령국들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끔찍한 “테러”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탈레반 스스로 밝혔듯이, 탈레반의 행동은 “[이런] 야만적 행위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첫 희생자인 배형규 씨가 살해된 날인 7월 25일 외교장관 송민순이 국방장관 김장수에게 건넨 쪽지의 내용(이른바 “8+6+9” 메모)은 한국 정부가 “탈레반이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질 살해까

지 염두에 둘 만큼 위기상황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연합뉴스〉)음을 보여 준다. 누군가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다.

정부와 우파들이 피랍자들에게 비극의 책임을 떠넘기려 안달인 것은 이번 사태의 불뚱이 다른 곳으로 튕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파병 정책이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도 철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극의 뿌리가 점령과 파병 정책에 있음을 단호히 주장해야 한다.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이지 피랍자들이 아니다.

“또 다른 한국인이 참극을 당하기 전에 … 이라크에서는 자주적 결정으로 철군해야 옳다. 그것이 또 다른 참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손석춘 전 <한겨레> 논설위원)

김용민

일본

점점 심각해지는
아베의 위기

아베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는 지난주 전면 개각으로 참의원 선거 참패를 수습하려 했지만, 신임 농수산상 엔도 다케히코가 비리로 6일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대중의 환멸만 자아냈다. 지금 아베 퇴진 여론은 과반을 넘는 다.

그러나 아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다.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9월 10일 열릴 국회에서 테러조치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거듭 선언했다.

그동안 일본은 테러조치특별법에 따라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는 미국 동맹군의 “무료 주유소” 구실을 했다. 여기에 2백20억 엔을 퍼부었다.

이 법의 연장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다. <산케이신문>, <후지텔레비전> 공동 여론조사 결과, 연장 반대는 54.6퍼센트에 이른 반면, 찬성은 34.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지원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이란 방면에서 작전하는 미군 함정을 불법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물론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거나 미일동맹 해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테러조치특별법 연장을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지원법을 만들기로 했다. 테러조치특별법 연장 반대를 아베 정권 교체 지렛대로 삼으려할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테러조치특별법 연장 거부는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일본 주류 정치에도 격변을 몰고 올 것이다.

또 이것은 오자와 이치로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운동에 자신감을 줄 것이다.

한규한

볼리비아 제헌의회 위기

우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2005년 라파스 광부 시위

기층 운동만이 개혁을
전진시킬 수 있다

8월 28일 볼리비아 동부 6개 주에서, 수도의 동부 이전 조항을 헌법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우파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동부 6개주는 우파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모랄레스의 제헌의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 준다. 모랄레스는 제헌의회에서 여당인 MAS(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우파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고, 헌법에 진보적 의제들을 삽입해 평화적으로 사회개혁을 완수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제헌의회는 2005년 대중 투쟁으로 약화됐던 우파들에게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기회를 제공했다.

우파들은 지난해 8월에 제헌의회 회기가 시작된 뒤부터 헌법 작성 작업을 사보타주했다. 그들은 올해 초 제헌의회에 복귀한 뒤에도 진보적 조항 삽입을 막으려고 개별 조항마다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모랄레스 정부가 여기서 양보하자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동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며 원외 동원에 나섰다. 동부 지역에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와 석유의 90퍼센트가 매장돼 있다. 이것은 모랄레스 정부의 개혁 정책을 좌절시

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우파 정치인들은 논란이 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책략을 부렸다. 대부분이 동부 우파 출신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진보적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결국 새 헌법 초안 작성 과정이 중단됐고, 8월 6일 예정이었던 초안 완성 기한은 12월로 연기됐다.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은 동부 수크레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헌법에 삽입하라고 나섰다.

심지어 일부는 “현재의 정국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볼리비아를 둘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며 내전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

국유화

우파의 야비한 수작의 최대 피해자는 볼리비아 민중이다. 볼리비아 인구의 3분의 2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산다. 모랄레스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와 일부 광산을 국유화했는데, 볼리비아 민중은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모랄레스 정부가 민중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대규모 산업과 토지의 국유화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국유화 대상을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무상몰수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제헌의회에서 우파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서는 그런 급격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고 오히려 개혁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모랄레스 정부는 우파의 시위에 맞서 대중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단지 제헌의회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야 한다.

볼리비아 운동은 여전히 역동적이다. 지난 7월 21일에 라파스 엘토에서 벌어진 반우파 시위에는 무려 1백5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시위 중 하나였다.

볼리비아 운동은 우파의 공격에 맞서 모랄레스 정부를 방어해 왔다. 동시에 그 일부는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광부들은 광산업 국유화 확대를 요구했고, 교사 노조도 최저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대표적 노동조합 연맹인 COB(볼리비아노총)은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반쿠데타·반우파 투쟁은 기층의 투쟁이 강력할 때 우파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더 급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행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김용욱

그리스 화재 분노의 불길이 무능한 정부로 확산되다

그리스에서 삼림 전체의 3분의 1이 타고 60여 명이 죽는 참혹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권 보수당은 이번 화재를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 말하지만 대중의 불만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매년 여름 산불이 발생했고 이번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3번이나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뜨거운 바람이 유난히 강

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는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 방재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사람들은 고대 올림피아 경기장 주변 화재 방재 장치들이 고장난 것에 더 크게 분노했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아테네 올림픽 유

치 과정에서 생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화재 방재 장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화재는 보수당 정부에 반대한 새로운 정치적 초점이 됐다. 2주 전에 수도 아테네에서 2천 명이 정부의 화재 방재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지난주에는 1만 명으로 늘었다.

BBC는 지지율 조사에서 큰 차로 뒤지던 사회당이 집권당을 바짝 추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BBC 아테네 특파원은 급진 좌파 후보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국제사회주의자 등이 속한 선거연합인 ‘반자본주의 좌파 그룹’이 아테네의 반정부 대중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리스 좌파 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9일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의 9일간의 영웅적 점거 파업이 성과 없이 안타깝게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 퇴각에 좌절하지 말고 교훈을 배우며 다음 투쟁을 준비할 때다.

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화성공장을 멈추는 파업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돼 왔다. 지난해에도 비정규직지회는 단호한 투쟁으로 원청에게 직접 고용 보장을 약속받았다.

이런 투쟁의 고비고비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제대로 연대하지 않았다. 노동자 연대의 대의를 외면한 이런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했다. 반면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공동투쟁기구인 '현장공동투쟁' 소속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는 큰 힘이 됐다. 특히 전투적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 동지들이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앞장섰다.

당연히 기아 사측은 이것을 깨기 위해 눈이 벌개져 있었다. 사측은 칼을 갈며 주도면밀하게 비정규직지회 파괴 공작을 준비했다. 파괴 공작의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과 각개격파였다.

금속 산별노조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1사1조직'(한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을 단일 노조로 통합한다는 원칙)이 역설적으로 사측에게 분열 공작의 기회가 됐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통제가 강화될 거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통합을 꺼렸다. 통합 속에서 독립적 운동을 건설하는 게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그러자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정규직노조로 직가입시켰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천3백여 명 중 5백여 명이 기아차지부로 옮겨갔다. 결국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은 약화됐다.

그러자 올해 기아 원·하청 사측은 무려 12차례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지회를 도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3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장2부 점거 파업이 시작됐다. 점거 파업은 곧바로 화성공장 전체를 마비시켰고 소하리·광주 공장까지 타격을 줬다. 50~60대인 8백여 명의 비정규직



8월 31일 열린 화성공장 앞 파업 연대 집회. 여기에 '다함께' 회원들도 5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교대로 점거 파업에 참가하며 투혼을 불살랐다.

그러나 사측도 초강경으로 나왔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무려 62명을 고소·고발했고, 곧 김수억 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해 7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전사 동지회'와 용역강패, 조·반장,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3백여 명의 구사대가 파업 농성장을 폭력 침탈했다. 사측은 교활한 악선동과 이간질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이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찢터미로 만들려 한다', '일부 정치 좌파가 순진한 아줌마·아저씨들 꼬드겨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등의 악선동이 퍼져갔다.

이간질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지부 지도부의 대응은 재앙적이었다.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소중한 일터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파업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 속에 정규직 지도부의 눈치를 본 금속노조 지도부와 지

역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실질적 연대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구사대와 우파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금속노동자의 힘'을 주축으로 한 '현장공동투쟁'이 헌신적으로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3년 연속 적자인 상황과 IMF 때의 끔찍한 구조조정 기억이 맞물리면서 우파의 악선동이 일부 후진적 조합원들 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조합원들에게 우파가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반동적 절망의 해결책이었다. 8월 31일에는 공장을 휘젓고 다니며 폭력을 휘두르는 3백여 명의 구사대에게 좌파 활동가들이 쫓겨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구사대는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동자의 힘' 천막을 불질러버렸다. 구사대는 기아차지부 간부도 떠밀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측과 구사대의 공격이 비정규직을 넘어 정규직 노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위기감을 느낀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뒤늦게 '구사대 폭력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우파에게 넘

어간 후였다.

더구나 사측은 도장2부 옆에 가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점거 파업으로 끊어진 생산라인을 이어서 모든 공정을 정상화하고 점거의 효과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결국 8월 31일 저녁, 노동자들의 눈물 속에 비정규직지회는 전술적 퇴각을 결정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새로운 각오였습니다. 사측 구사대가 판치는 현장을 다시 세우겠다는. 원·하청 연대 투쟁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지회 게시판에 올린 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이후 정규직 노조와 통합해 공동교섭·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점거 종료를 선언하는 집회에 참여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직가입과 연대 부족'을 사과하며 강력한 연대를 약속했다.

영웅적인 점거 파업을 벌인 비정규 투사 8백여 명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9월 3일 점거 종료 후 첫 집회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와 분위기는 결코 노동자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음을 보여 줬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어딜 가든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된 좌파와 일관된 우파, 그리고 동요하는 중간층이 있다'는 것이다. 좌파가 단결해서 단호히 투쟁하며 올바른 전략·전술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동요하는 중간층은 좌파에게 건인될 것이다. 반면 좌파가 분열해 있고 오락가락하고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면 중간층은 우파에게 이끌릴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 기아차지부 지도부가 단호하게 비정규직을 방어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이번 투쟁에서 쓰러린 교훈을 배워야 한다. 다가오는 보복 공격에 맞서며 다시 현장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도모하고 지도부가 투쟁을 외면할 때는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과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전지윤

이 글의 전문은 <맞붙> 웹사이트를 보시오

칠레 노동자 시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노한 노동자들

8월 29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칠레 곳곳에서 바첼레트 사회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칠레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자 단결'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는 주류 언론과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8개 지역 노조, 대학생, 교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최저임금과 연금 인상, 교육·의료·주거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바첼레트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시위 전부터 '노동자 단결'이 폭력을 선동하고 있고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매우 폭력적으로 다뤘고 참가자들 약 3백80명을 연행했다. 시위에 동참한 사회당 상원의원이 두들겨 맞기도 했다.

바첼레트 정부는 '사회 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부분 답습했

다. 지난해 초 학생들의 전투적 투쟁 덕분에 교육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

아시아 수출 덕분에 칠레 경제가 매년 6~7퍼센트씩 성장하면서 자본가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여전히 최저임금(약 26만 원) 이하를 벌고 있다. '노동자 단결'의 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 1백만~1백50만 원인데 말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이 하위 20

퍼센트의 13배가 넘었고,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국부의 47퍼센트를 장악했는데, 이는 사상 최악이다.

칠레 노동자들은 더는 바첼레트 정부의 개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투쟁을 시작했다. 최근 승리를 거둔 코델코의 노동자들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표적 사례다.

칠레 언론들은 2006년 교육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 올해 코델코 노동자 투쟁에 이어 정부가 '3연타'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바첼레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1퍼센트로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바첼레트 정부가 대중의 기대를 계속 저버린다면 '3연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김인식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특별위원회 위원

진보대연합은 (그 근거가 옳든 옳지 않은 간에) '민주노동당만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장(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가 빚어낸 정치적 공백을 매우는 한편, 그런 개혁 실패 — 특히 한미FTA와 파병 강행 추진 같은 — 에 도전하는 운동들에 정치적 표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진보대연합의 핵심 취지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3월과 6월에 잇달아 진보대연합을 민주노동당의 주요 대선 전술의 하나로 채택했다.

그 뒤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특위는 두 차례 연속 토론회를 열었고, 대중단체들과도 꾸준히 접촉했다.

최근에 사회당이 진보대연합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해 왔다. 8월 22일 '진보대연합 추진을 위한 민주노동당 · 사회당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두 당은 진보대연합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구축 노력이 부분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0년대 중엽 이래 각자 다른 정치적 경로를 밟아 온 두 당이 단결한다면 그것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상징 효과를 낼 수 있다.

완결편

그런데 진보대연합을 이룰 다른 축, 즉 노무현에 환멸을 느끼고 있지 만 아직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고 있는 진보적 유권자 층을 대변하는 세력(과 개인)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임종인 · 이수호 · 지금종 등이 주축이 돼 결성한 새진보연대가 진보대연합의 한 축 날개가 되려는가 싶더니 임종인 의원이 탈퇴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진보대연합에 호의적이었던 일부 — 가령, 정범구 전 의원 — 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쪽으로 돌아섰다.

진보대연합 논의가 탄력이 붙었던 시기는 3~4월이었다. 이 때 한미FTA 반대 운동과 여론이 분출하면서 범여권 내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났다. 천정배와 김근태가 한미FTA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단식까지 했다.

그러자 범여권이 분열해 그 일부

(예컨대 천정배)가 진보진영 쪽으로 건너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겨났지만, 그는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버리고 진보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천정배나 NGO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한 '미래구상'이 (필패할 것이 자명한) 범여권의 재구성에 가담한 것은 운동의 발전 수준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래구상'이나 일부 부르주아 개혁 정치인들을 염두에 두고 진보대연합에 관심을 보였던 민주노동당 내 일부 자민통 세력은 금세 흥미를 잃어 버렸다.

그 중 일부는 민중참여경선제로 돌아섰다. 진보대연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민통 계열의 일부가 민주노동당 중심성 강화론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PD 계열이 진보대연합에 더 열의를 보이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진보대연합 제안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 일찌감치 불붙은 당내 경선도 진보대연합 추진에 어려움을 줬다. 당 밖 진보 정치 세력의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의 진정성을 가늠이나 의심하고 있던 터에(그들은 민주노동

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연합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를 무척 궁금해 했다). 민주노동당이 자체 후보 선출에 몰두하자 선뜻 논의 테이블에 다가서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임종인 · 정범구 등이 7월 초에 보였던 관심은 얼마 못 가 사라졌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진보대연합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문국현 현상'

그러나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대선 정국을 휘감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좌충우돌과 우왕좌왕을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박근혜로 대변되는 '집토끼')과 새로운 기반('산토끼')을 모두 잡으려는 이명박의 구상이 현실에서 모순을 빚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은 당 쇄신과 화합사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홉 난쟁이들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신당도 '도로 열린우리당'일 뿐이다. 한 예로, 열우당의



노무현의 개혁 실패가 낳은 정치적 공백을 매우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지막'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진표가 민주신당의 '초대'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그러므로 진보대연합의 애초 취지, 노무현의 개혁 실패가 낳은 정치적 공백을 매우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문국현의 등장이 이런 계획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문국현의 등장으로 민주

노동당은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지 기반이 상당히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진보대연합이 제안된 것도 이런 사태의 도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진보대연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썩 내키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

문국현의 등장을 놓고 두 가지 편향이 존재하는 듯하다 —

마냥 추수하거나 차별성을 주기 위해 폭로와 비판만 하는 것. 민주노동당 내에는 후자가 좀더 지배적인 듯하다. 5년 전 노무현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

에 진저리를 치는 개혁 염원 대중은 지금 문국현에게 개혁 희망을 걸고 있다. 문국현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과 함께 비정규직 · 환

경 등에 대해 그가 개혁적 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국현에게 개혁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사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을 통해 붙잡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경쟁 심리가 발동해 치열한 논쟁이 양 진영에서 벌어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국현이 아직 그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문국현의 말과 실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시험대

그러기 위해서는 문국현에게 행동을 제안해 실천의 시험대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 문국현이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면 뉴요커 · 이랜드 투쟁을 지지할 것을, 한미FTA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한미FTA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문국현이 그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문국현의 의제는 민주노동당의 그것과 일부 겹치지만, 그는 아직 운동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을 않고 있다. 하지만 문국현이 범여권의 일부로 남아 있어서 그의 의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구축 시도의 성공 여부는 '문국현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것 같다.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가?

김하영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이자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9월 2일 아를 간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은 연말이라는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계관은 "미국 측이 정치 ·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는 북한측 주장을 부인했다.

힐은 "미북관계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관계"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지막 단계"로 돼 있는 핵무기 폐기 뒤어나 북미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2단계(신고와 불능화) 이행에 대한 대가로 어떤 정치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혹

비핵화 2단계(신고와 불능화)는 북한에게는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한 조치이다.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에 요구된 이행 조치는 핵 동결뿐이었고, 핵시설 해체는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설치되는 시점(10년 정도 뒤)으로 미뤄져 있었다.

북한은 핵시설 해체 전에 북미관계 개선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동결을 풀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북한은 2002년 말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핵시설 불능화가 실제로 이 행된다면,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북한 핵시설이 불능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핵시설 불능화가 실제로 이 행된다면,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북한은 2002년 말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에 비해 미국 측의 "정치적 보상"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행동(북한) 대 말(미국)'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크리스토퍼 힐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 핵은 미국의 대북 적

북핵 불능화하면 이라크 문제를 만회할 수 있을까?

대 정책의 결과이다. 따라서, 노움 촛스 키가 지적하듯이, "위기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어쩌면 종식시킬 수도 있을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나서도록 사실상 재촉하고 있는 위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임박한 위기: 위험과 기회, <먼슬리 리뷰>)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끝났거리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6자회담 마술이다.

둘째,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북한은 여러 차례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까지 관계 정상화를 내켜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온 쪽은 미국이었다. 전이나 지금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

지금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 입장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2단계(신고와 불능화) 이행에 대한 대가로 어떤 정치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존 페퍼는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는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부시 정부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원한다는 것뿐이다. 심증팔구 근시안적 시각에서 말이다. 데이비드 생어는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일정을 지킨다면 부시 정부에게는 중대한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시의 바람대로 이라크 문제를 만회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장기적 전망 없이 일시적 문제 해소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그동안의 북미 합의들과 최근의 북미 타협 사이에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부시 정부를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부시 정부를 떠미는 힘에 의해 결정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중동 전선의 성태다.

좌충우돌하는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

“산토끼”도 잡아야 하는데 …”

“이명박 후보의 [지난] 1주일은 ‘대국민 메시지의 부재’와 ‘좌충우돌, 우왕좌왕 정치행보’로 정리될 수 있겠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실제로 이명박은 “[이번 대선에]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라며 수구적 본심을 드러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나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명박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노무현의 개혁 배신에 실망해 이명박에게 한가닥 기대를 걸게 된 사람들은, 이명박의 추잡한 부

패 전력과 친미 우파적 밑천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명박이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 깃발을 놓지 않을 박근혜 지지자들로 방아박을 구축해야”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나라당 “집토끼”를 향해 구애하며 우파적 본색을 드러내면 “산토끼”들의 실망이 커질 것이다. 결국 전통적 우파 지지층의 신임을 얻으면서, 개혁 염원 대중에게도 다가야 한다는 모순된 처지가 이명박의 오락가락을 낳고 있다.

김용갑도 “색깔이 왔다갔다, 너무 어지럽다. … 국민이 어떻게 이 후보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냉소했다. 실제로 최근 이명박 지지율은 8퍼센트나 하락했다.

더구나 핵심공약인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난 5월에 비해 11퍼센트나 늘어났다. BBK 금융사기의 핵심인 물인 김경준은 9월 말 귀국을 예고하며 혼자 죽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보호법’인 ‘허위 사실폭로금지법’ 등을 제정해 방어할 시도하지만, 설욕을 노리는 박근혜의 정치활동 재개도 이명박의 초조함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락가락과 분열, 부패 추문의 지뢰밭을 지나가야 하는 이명박과 ‘두나라당’의 미래는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송수

통합민주신당의 ‘도토리 키재기’식 ‘컷오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선용 졸속 정당답게 경선 과정도 졸속이다. 국민선거인단의 3분의 1이 ‘유령선거인단’이다. 자기도 모르게 졸지에 선거인단이 돼버린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합민주신당의 물결은 열우당 시절보다 더 흉했었고 ‘정체성’은 절망적이다.

당선이 유력한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추미애는 모두 한미FTA 찬성론자들이다.

지난 31일 열린 통합민주신당 의원 정책 워크숍은 이 당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줬다. “성장률이 높아야 분배도 잘 된다”, “3불 정책”도 ‘수월성 교육’으로 바꾸자”, “국민들이 NLL을 영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등의 얘기가 쏟아졌다.

더구나,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운재의 비리 의혹은 계속 커질 조짐이다.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스캔

‘반민주 낡은 사기당’과 문국현 바람

들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변양균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한동안 뜸했던 노무현의 적반하장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은 “소위 진보적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도 일색으로 나를 조진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노무현이야말로 온갖 개악과 배신으로 개혁 염원 지지자들을 “조조”였다. 이 사기꾼들을 묶어 주는 유일한 끈은 이명박 거품이 언젠가는 꺼질 것이므로, 그러면 자기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망상뿐이다.

범여권은 이런 요행을 바라며 ‘노무현과 거리두기’와 ‘이명박 때리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친노’, ‘개혁파’,

‘보수파’가 뒤섞인 잡탕상 때문에 ‘노무현과 거리두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썩썩 한나라당’ 후보 손학규를 앞세운 ‘이명박 때리기’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인상적

이 때문에 일부는 문국현을 대안으로 삼으려 한다. 문국현은 순식간에 지지율을 3퍼센트로 올리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가짜 경제”라고 비판하며 개혁 염원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2년 이상 유지될 것 같은 일 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하도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모순도 있다. 그는 한미FTA 협상에서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WTO 하에서 FTA는 당연한 순리”라고도 했다. (월간 <말> 7월 호)

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번에 나쁜 선택을 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정치권”이라며 박성수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도 있었다. 범여권과 선을 그으면서도 합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런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반복되면 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한편,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 속에서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나라당-범여권의 ‘신자유주의와 정쟁 동맹’에 도전할 진보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규한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가 공식 출범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진보연대가 한국 진보 운동 전체의 단결 체임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므로, 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함께’로 말하자면, 자주계열(NL) 활동가 동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맑스와 레닌은 어떤 정치 단체를 판단하려면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 행동이다”(1915년 초반에 씌어진 결로 추정되는 “잘못된 기치 하에서”라는 글).

진보연대는 상설 연대체를 표방하며 건설되기 시작했다. 연대체는 전통적 용어로는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체는 정당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상이한 정치 조류가 한데 모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과연 진보연대가 그런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저 자주계열 일색이다. 그러므로 진보연대는 전선체가 아니다. 그것은 자주계열의 정당이다. 비록 계열 내에 상이한 분파가 존재할지라도 말이다.

이에 대해 진보연대 간부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 즉, 다른 정치 조류가 동참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정치 단체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다함께’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나름의 불참 이유는 있고 진보연대가 그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 듯하지도 않다.

‘다함께’로 말하자면, 우리는 진보연대(준) 출범을 위한 논의에 몇 차례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연대식 모델이 자주계열의 정치 원칙과 우리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단결을 강요하고(마치 원칙의 차이가 의미 없고 사소한 문제인 양함으로써), 사안별 연대체 안에서 공동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보연대의 우위를 고집해(마치 사안별 연대체가 더는 필요 없게 된 양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코끼리

진보연대(준) 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안별 연대체를 주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진보연대(준) 간부들의 말을 믿고 단지 한 가지만 논의하자고 했다. 연대체는 연대체답게 정치적으로 느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보연대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사안별 연대체에 대한 진보연대 간부들의 태도가 애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는 듯해, 우리의 회의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보연대 간부들은 사안별 연대체가 진보연대의 커버(엠펜물) 구실을 해야 한다고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는 중요하지도 가치가 있지도 않다고 보아, 광범한 운동은 모두 진보연대의 기치



하에 또는 진보연대 간부들의 주도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예컨대 진보연대는 최근호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을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상황실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상황실장 자리는 2004년 8월 이후 공석이었고, 만약 필요하다면 파병반대국민행동 구성원들이 결정할 일인데 말이다. [이런 사례들은 <맛불> 웹사이트에 실린 축약하지 않은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정치적으로 느슨할 필요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것은 결국 자주계열의 정치 원칙 문제였다. 우리는 자주계열 동지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민족 자주’와 ‘반미’를 고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만약 자주계열 동지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특수 표지를 고수하려 한다면 우리인을 국제주의, 노동자 권력 따위를 앞세우지 말라는 법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보연대(준) 지도부의 대응은 단순한 조삼모사였다. ‘민족 자주’ 대신 ‘나라의 자주권’으로 말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은 진정한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표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 요약되는 좌파민족주의 강령과 이데올로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좌파민족주의 강령과 이데올로기만이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허구한 날 강령과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국제주의나 노동자 권력 같은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절조 없는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거나 하는 두 가지 나쁜 선택만을 강요받고 싶지 않았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단지 자

주계열뿐 아니라 평등계열(PD)과 그 밖의 다른 조류들도 있는 데다, 수도에서는 자주계열, 평등계열, 그리고 ‘다함께’ 등 좌파가 대략 3등분하고 있어서 세 조류 사이에서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존재한다. 특히, 자주계열과 ‘다함께’ 사이에서 평등계열이 때때로 충격 흡수 구실을 하게 되곤 한다.

진보연대에는 이런 세력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다함께’가 진보연대에 가입한다면 자주계열과 ‘다함께’ 사이에 세력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게 돼, 자주계열은 마치 응접실의 코끼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설사 자주계열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직무 안배를 한다 해도 소수파인 우리는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실제로 갖고 있는 제3세력이 중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주계열이 진보연대를 주름잡게 마련이다. 하물며 자주계열은 핵심 간부 임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스물 대여섯 명의 상근·반상근 활동가를 확보해 놓는 등 개방적인 직무 안배에도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전통과 그동안의 전력상 민주적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전선’

상설 연대체가 이처럼 경직되게 운영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진정한 행동 통일은 오히려 원칙 문제들을 놓고 분리해야 이룰 수 있다. 원칙 문제들을 놓고 제대로, 조직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면 단결이 가능한 당면 이슈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된다. 진보연대 안에서 원칙 문제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끊임없이 마비된다면, 원칙의 훼손 없이 공동 행동이 가능한 전술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원칙을 놓고 조직 분

리를 하면 당면 문제들을 놓고 연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예로부터 자주계열 동지들이 애써 전선체를 구축한다면에서도 실제로는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바로 그들이 스탈린주의 유산의 일부인 ‘통일전선’ 개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려면 사회 변혁 사상과 강령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부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대체는 상설이든 한시든 전체 운동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운동을 반영하는, 전체 운동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의 효과는 이데올로기와 포괄적 강령이 다른 운동 단체들을 이반시키는 한편, 운동을 지배하겠다는 유혹은 자주계열 간부들 사이에서 더 키울 것이라는 것이다.

지면 제약상 말을 맺자면, 진보연대는 진보운동을 단결시키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특정 정치 조류 고유의 이데올로기와 포괄 강령을 고집하는 종파적 방식과 운동을 지배하려는 일종의 직·반장(職班長) 같은 태도 때문에 운동을 분열시킬 것 같아 우려된다.

대안은 자주계열이 진보연대를 그냥 자신의 독자 정당으로 보고 오히려 각종 사안별 연대체와 진짜 상설 연대체인 민주노동당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일에 인내심 있고 겸허하게 동참하는 것이다. 그 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운동을 진정으로 결속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다함께’는 사안별로 진보연대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진보연대의 활동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연대 형식의 본보기를 만들려 애쓸 것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오늘날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14세기에 유럽 등지의 봉건제 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일련의 오랜 투쟁·혁명·전쟁을 거친 후 19세기 초 유럽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확립됐다.

바로 이때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 법칙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 칼 맑스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맑스 시대의 자본주의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본주의의 작동 규모이다.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한 1840년대에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지배적인 생산양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선진 공업 형태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영국·네덜란드·벨기에와 프랑스·독일의 일부 지역 등 북서 유럽 귀퉁이에 국한돼 있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

자본주의는 무역과 특히, 무력을 통해 이미 오래 전에 거의 모든 곳에 ‘이르러’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 지구상에서 재화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적 토대에서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1848년에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었던 영국은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강국이었다. 19세기 말쯤 독일이 프랑스를 앞질렀고 미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분명히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앞질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지배력은 훨씬 더 확고해졌고, 미국에 맞설 만한 경쟁 상대는 소련 국가자본주의뿐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다. 군사적 지배력도 그렇다. 그러나 미국이 비록 냉전에서 승리했음에도 그 경제적 주도력은 많이 약해졌다. 1950~60년대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 기적”은 미국을 압박했고, 지금은 중국이 새로운 도전자로 떠오를 뿐 아니라 인도도 크게 도약하고 있다.

귀퉁이

게다가 한국과 브라질처럼 중요하고 독립적인 자본 축적의 중심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전 세계를 더 완벽하게 ‘메웠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다국적이다.

이런 지리적 확산과 더불어 주요 자본주의 기업들 — 엑손모빌·월마트·도요타·삼성 — 의 규모와 범위가 엄청나게 증대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집중과 세계 경제 통합의 정도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원료와 공산품의 국제 운송과 판매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상품을 만드는 과정 자

체가 국제적 과정이 됐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1970~80년대의 국제적 경기 후퇴 같은 심각한 국제적 위기들, 특정 나라나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규모의 혼란들이 있었다.

국가의 경제적 구실도 대체로 증대했지만, 그 과정 또한 아주 불균등했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고 1989~91년에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래로 국가의 구실은 히틀러·스탈린·로즈벨트·케인스의 시대보다 분명히 쇠퇴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예측하거나 원하는 만큼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대중의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른바 서방의 선진 공업국들에서 그랬고, 그 뒤에는 상당수의 신흥 공업국들에서도 그랬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생활수준 통계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각국의 평균수명은 대강의 그림을 보여 준다.

1850년에 미국 백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38세였고 백인 여성은 40세였다.

2001년에 미국 백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75세, 여성은 80세로 늘었다. 캐나다·스웨덴·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 국가들의 현재 평균수명은 미국보다 높다. 멕시코·브라질·폴란드와 심지어 중국 사람들의 평균수명도 이제는 70세를 넘어섰다.

연속성

이런 변화를 피상적·일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성공 신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변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첫째, 근본적인 사회적 생산관계가 변하지 않았다. 주요 생산력은 여전히 극소수가 소유·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직접 생산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동[과정]과 노동 생산물에서 소외돼 있다.

그들이 생산하는 세계는 그들 자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이다. 사회는 적대적인 계급들 —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 로 분열돼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정반대다.

둘째, 체제의 근본적 동역학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중국이나 산업혁명기의 영국이나 체제의 근본적 동역학은 똑 같다. 즉,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 먼저인 자본 축적 드라이브가 그것이다.

이런 근저의 연속성 때문에, 앞서 말한 자본주의의 변화들은 모두 어둡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간직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이 실질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불균등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평균수명을 다시 거론하자면, 앙골라가 37세, 모잠비크가 40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42.5세이다.

위협

또, 국가간 불평등과 국내의 불평등이 모두 심화하고 있다. 1980년 미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생산직 노동자보다 42배 많았다. 2000년에는 5백25배나 많아졌다!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고 부자 2백25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 1조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25억 명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었다. 또, 세계 최고 갑부 세 명의 재산이 48개 최빈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의 파괴적 경향도 그만큼 증대했다. 전쟁과 대량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단연 최고였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국으로 부상하자)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 경향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대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기후 변화를 통해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가하는 파괴적 위협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맑스가 정확히 예측했듯이, 자본주의의 국제적 ‘승리’처럼 보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 즉 국제 노동계급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지리적으로도 확산되고(한국에서 남미까지) 점차 성장하는 거대 도시들(캘커타에서 카이로까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증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병설유치원

“부당 해고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 주세요”

올해 2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관내 각 시·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전임강사들은 1980년대 유아교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돼 10~20년 동안 일해 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다. 이 때문에 경기·경북·경남·충남·전북·전남 등의 교육청에서는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해소와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전임강사들을 모두 정규직화했다.

그러나 유독 강원도교육청은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채용 불허’ 방침을 어기고 전임강사를 양산해 저임금으로 부려먹어 왔다. 2005년에는 전임강사 전원을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발령하는 식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이번에 무더기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3월 5일 ‘강원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유치원해복투’)를 결성해 반년 넘게 항의와 진정, 천막 단식 농성 등을 벌이며 투쟁해 왔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지난 5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강사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고, 해고자들을 원직



3월 27일 집회에서 퇴직금을 반납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노동자들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도교육감 한장수는 “관련 법규와 재량권” 운운하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장수는 2006년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으로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자다.

이에 ‘유치원해복투’는 “지방노동위원회 명령 즉각 수용, 즉각 원직복직, 그동안

의 불이익 배상, 해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의 투쟁에 지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교조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세로 맞서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미예(강원도병설유치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국가인권위 농성

여성 노동자 4명이 비정규직 악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 2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이다.

송파구청에서 5년이 넘게 일한 임정재 씨와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정수운 씨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7월 1일자로 해고됐다. 정수운 씨는 해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누워 있던 6월 30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립병원인 보라매서울대병원에서 23개월 일한 김은희 씨도 무기계약 전환 한



달을 앞두고 해고됐다.

특히, 7년 동안 연초등학교에서 일한 채성미 씨는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학교 기간제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에 의한 해고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경찰 투입 말고는 뒷집만 지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할 계획이다.

강동훈

지역 사회포럼

서울 남부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일시: 9월 12일(수) 오후 8시

장소: 방배1동 사무소(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일시: 9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동부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일시: 9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이정원(‘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 이주노동자,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가)

문의: 019-9731-7299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부대학 통합포럼

맑스주의와 종교

연사: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대학원에서 종교사 화학 전공)

일시: 9월 6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문의: 010-9880-9193

성공회대

지구온난화와 기후재앙

연사: 안준관(환경운동연합 에너지후본부 부장)

일시: 9월 6일(목) 오후 7시

장소: 새천년관 7308호

문의: 011-9875-4790

동부대학 통합포럼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김하영(주간 <맛불> 편집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일시: 9월 6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210호

문의: 011-9937-1755

북부대학 통합포럼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일시: 9월 18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문의: 016-9353-5619

함께합시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일시: 9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역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토론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한국군 파병”

일시: 9월 12일(수) 오후 1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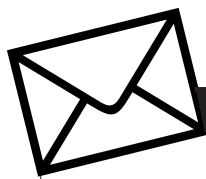
이경해 열사 추모와

한미FTA 비준 저지 대회

일시: 9월 11일(화) 오후 7시

장소: 청계광장

주최: 한미FTA범국민



여성을 괴롭히는 외모 중시 사회

개그맨 김미려의 가수 변신 과정을 보여 주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미려는 괴로워>는 성형외과 의사, 헬스 트레이너,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해 그녀를 '성형미인'으로 바꿔 놓는 과정을 보여 준다.

두 달 안에 '예쁘고 섹시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를 가둬 놓고 과도한 식이요법과 혹독한 운동을 시키고, 지방을 없애는 약, 보톡스, 필러 주사를 동시에 수십 번씩 얼굴 곳곳에 쏴야 한다. 몸매를 예쁘게 다듬어 준다며 시작한 전신 지방흡입 수술은 마취로도 재울 수 없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다.

"나 달라질 거야" 하고 외치며 순식간에 날씬해진 그녀의 이야기는 77 사이즈 여성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별에 편승해 여성의 외모 중시 관념을 강화한다.

지난 8월 27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국민의 92.2퍼센트, 인사담당자의 78퍼센트, 미취업 여성의 94.2퍼센트가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여대생의 52.5퍼센트가 이미 미용성형을 했고, 82.1퍼센트가 원하고 있다(서울대 의대 정신과 발표). 과도한 다이어트로 사망하거나 끔찍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도 부지기수다.

여성의 외모만 중시하는 정신 나간 사회가 여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류민희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의 속 시원한 토론회

한나라당 경선 과정이 비리 폭로로 얼룩진 추악한 퍼포먼스였다면 8월 30일 MBC에서 방송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UCC 토론회"는 180도 달랐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문제제기에 세 후보 모두 진보정당의 후보다운 멋진 답변을 했다.

심상정 후보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폭로하며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FTA 막고, 비정규직 철폐"하기 위한 '1백만 총궐기' 참가를 호소했다.

노회찬 후보는 "인질 사태의 근원에는 파병이 있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해외 파병군의 철군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백미는 이랜드 투쟁에 관한 대목이었다. 한 이랜드 조합원 아들의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나"는 영상 질문에 세 후보는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줬다.

노회찬 후보는 "추석에 이랜드에서 물건 사지 말자"고 호소했다. 권영길 후보는 "박성수 같은 악덕기업주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방정석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도 통과했을 것이다. 이날 토론은 나에게 무더위를 식혀 준 한 줄기 바람 같았다.

이상수



계속 투쟁의 '폭탄'을 떨어뜨리자는 김경욱 위원장

투쟁 승리의 길을 제시한 김경욱 위원장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 편지에는 그의 여전한 투지와 열정이 묻어났다. 김경욱 위원장은 매우 고맙게도 "‘다함께’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라고 말해주었다. 또 '다함께'가 감옥으로 보내준 <맛불> 신문이 "읽기 수월하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승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었다. 김경욱 위원장은 이 투

쟁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 비유하며 승리의 길을 주장했다.

"헤즈볼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은 내부단결과 국제여론"이었습니다. ... 헤즈볼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본토에 연속해서 로켓포를 날렸습니다. ... 내일 퍼부어야 할 탄약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오늘 적을 코앞에 놓고도 '경고'만 하면 안 됩니다. '1천 명의 선봉대'는 이스라엘 본토에 폭탄을 당장 계속 투하해야 합니다."

최영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탄압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의 활동가 5명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 탄압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들이 고발한 해외 진출 한국 자본가들의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다.

필리핀 수출자유지역 카비테에 진출한 한국 기업 청원패션과 필스전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건설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다. 심지어 청원패션은 M16 소총으로 무장한 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했고, 필스전은 용역 깡패를 시켜 여성 노동자 2명을 납치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론스타가 했던 것처럼 '먹고 뛰는' 한국 기업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

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만행을 지원하는데 여념이 없다. 주필리핀 한국 대사는 아예 "나는 필리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총 활동가인 수하르토는 "국제적 연대만이 국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 활동가들은 9월 3일 필리핀 투자 한국기업인(주)일경 본사 앞에서 '한·필리핀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참가해 국제적 연대의 모범을 보였다.

승영

짧은 투쟁 소식들

환경미화원 파업

경기도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외주화에 맞서 환경미화원 1천여 명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강제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은 "[9월 5일 시작되는] 교섭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이랜드 비정규직과 공동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반국가단체에 잠입해 그 수괴와 회합, 통신하는 반국가적 행위와 다름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민주신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반드시 내려앉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 출교생에 대한 지지의 확산

개강과 9월 20일 선고 재판에 맞아 고려대 출교생들이 투쟁의 대의를 알리며 학내외의 광범한 지지를 모으고 있다. 벌써 고려대 교수 19명과 전국 각 대학의 단과대와 총학생회장 80명의 탄원서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는 고려대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 호소할 예정이다. 또 이런 지지를 모아 재판 전에 집회도 한 차례 열기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투쟁 결의 집회

8월 29일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투쟁결의 촛불문화제가 증권거래소 앞에서 열렸다. 코스콤 노동자들과 다양한 연대단체 등 1백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코스콤 사측은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다시금 기본합의서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9월 6일부터 2차 파업을 할 예정이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http://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광기 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한다.

이주노동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따져 물으면 물매를 맞으며 개처럼 끌려가기 십상이다. 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발목이 부러져 단속반에게 붙잡혔다. 이태원 이슬람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단속이 벌어져 15명이 잡혀갔다.

수원에서는 7년 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해 노동부를 찾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행했다. 마땅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그러기는커녕 경찰에 이 이주노동자를 넘겨줬다.

8월 28일에는 미등록인 중국 국적 동포 여성이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그것도 장염으로 고열이 끓는 아기와 함께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밤새 구금돼 있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아기 엄마를 석방시키려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한 술 더 떠서 법무부는 8월 28일 이주노동자가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주노동사무실 앞에 단속 차량을 대놓고 이주노동자 15명을 잡아갔다.

출입국관리소는 9월 3일, 25인승 미니버스까지 동원해 성수동 일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사냥’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이주노동자 서울지부 부지부장인 민투 동지도 연행됐다. 그는 반전 운동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했던 투사였다.

막가파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올 하반기부터 체류 기간을 넘긴 체류자가 급증할까 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뒤 2007년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약 16만 2천여 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중 2004년에 들어온 수만 7천여 명이다.

특히 정부는 눈엣가시인 이주노동자를 표적 공격해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문화춘은 이주노동자 관계자들 면전에서 “이주노동자 위원장까지만을 안다. 까지만을 잡겠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이주노동자 주요 활동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며 이들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 반대 운동은 이주노동자 방어도 함께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공동행동’과 이주노동자는 서울·수원 출입국관리소와 수원노동청 앞에서 최근 벌어진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신속하게 조직했다. 9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탄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이 심한 지역들에서는 해당 지역 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

지역 주요 단체들과 논의해 9월 14일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고, 안산에서도 지역 단체들과 함께 9월 30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민변의 이주노동자 전담 변호인단과 함께 최근의 불법 단속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의 정도와 수위는 이 운동의 광범함과 규모와 지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수공동대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된 ‘이주공동행동’은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해

이렇게 합시다

- 아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실태를 대학과 직장장, 단체 사무실 등에 게시합니다!(‘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www.migrantsad.org의 ‘단속 상황 게시판’ 참조)
- 자신이 속한 노조, 학생회, 단체에서 이주노동자 방어를 호소하는 모임을 열어봅시다.
- 이주노동자가 9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개최하는 단속 항의 집회에 참가합니다.

- 단속 장면을 목격하면
 - 각 지역 긴급 연락처(‘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로 신속히 제보합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제보합니다.(migrantsad@naver.com)
 - 항의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방어를 호소합니다!(단속의 위법성은 ‘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 ‘공자사항’ 참조)
- 이주노동자 방어 캠페인에 함께합니다.(연락처 - ‘이주공동행동’ : migrantsad@naver.com / 이주노동자 : 02-2285-6068, migrant@jnbnet)

뉴코아·이랜드 투쟁

추석 집중 타격 투쟁을 건설하라

최영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매장 봉쇄 투쟁과 함께 부산, 울산, 순천, 청주, 천안, 대구 등을 순회하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투쟁 기금 전달도 계속되고 있다. LG카드노조와 전공노는 각각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시그네틱스노조는 6년 만에 가압류가 풀려 되찾은 조합비 가운데 1백만 원

을, 민주노동당은 당원 모금 1차분으로 2천9백만 원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었던 파업 조합원 1인당 매달 생계비 50만 원 지원을 시작했다.

한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코스콤 비정규직 지회 2차 투쟁 출정식, 기아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 지지 집회, 민주연합노조 파업 집회, 이주노동자 방어 집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을 포함한 수십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미 12명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뉴코아·이랜드 조합원과 연대했던 사람들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사측은 ‘다함께’와 주간신문 [맞불]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구사대와 경찰의 폭력 만행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8월 31일 홈에버 상암점 매

장 봉쇄 투쟁에서 경찰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며 16명을 강제 연행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여론의 지지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정부와 기업주들이 극단적 폭력 탄압으로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폭력은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에서도 나타났다. 저들은 더러운 폭력으로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불러온 투쟁의 물결을 완전히 잠재우고 싶어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약속한 추석 전 집중 매출 타격 투쟁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부문을 넘어 전국으로, 상층을 넘어 기층으로 확대되는 연대 투쟁이 건설돼야 할 때다.